

# 고 발 장

## 고발인 1.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이영선, 이상선, 하승수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로 177-2 4층

## 2. 함께하는 시민행동 ‘좋은예산센터’

대표 김주일  
서울 마포구 성산동 249-10 시민공간 나루 5층

## 3.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대표 이승휘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20 삼영빌딩 2층

고발 대표진술인 하승수 H.P. 010-2537-9401

## 피고발인 1. 이은재(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2. 백재현(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 황주홍(현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4. 강석진(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피수사의뢰인 서청원(현 무소속 국회의원)

고발인들은 위 피고발인들을 형법 제347조 사기 혐의로 고발합니다.

## 다 음

고발인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정보공개운동 및 예산감시운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그리고 대표 고발진술인 하승수는 세금도둑잡아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고발인들은 피고발인들을 아래와 같이 고발합니다.

### 1. 고발경위와 요청사항

가. 고발인들은 2017년 초부터 국회에서 사용되는 입법및정책개발비라는 예산항목에 대해 조사를 해 왔습니다. 2017. 6. 5. 대표고발진술인 하승수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라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사용된 입법및정책개발비 지출증빙서류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국회사무처는 비공개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2017. 9. 3.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고 2018. 2. 1. 서울행정법원은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국회측은 항소를 했고, 2018. 7. 5. 서울고등법원은 국회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측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고발인들은 2018. 8. 29. - 30. 양일간 입법및정책개발비 지출증빙서류를 열람했고, 필요한 부분을 복사받았습니다.

나. 고발인들이 공개받은 입법및정책개발비 지출증빙서류 중에는 국회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발주할 수 있는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정책연구용역 지출증빙서류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고발인들이 공개받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총 151명의 국회의원들이 338건의 소규모 정책연구용역을 맡은 것으로 되어 있었고, 그에 지출된 예산은 1,209,827,040원에 달했습니다.

다. 그러나 고발인들이 자료를 본 순간,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문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연구용역을 맡은 사례들이 여럿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고발인들은 언론(뉴스타파와 MBC)와 함께 사실관계 확인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범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들이 드러났습니다.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사례들이었습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하지도 않은 연구용역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연구용역비를 타낸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런 사실이 의심되는 건들이 발견된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점이 발견된 의원들의 경우에는 2016년 6월 - 2017년 5월 이외의 기간에 대해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료를 조사하였고, 더 많은 불법들이 드러났습니다.

라. 국회의원들이 국민세금을 빼먹은 행위는 매우 중요한 범죄행위이므로, 고발인들은 오늘 고발장을 접수하기에 이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고발장에 기재한 피고발인들의 행태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그 이유는 국회의원 소규모정책연구용역 예산이 지급되는 경로가 아래와 같기 때문입니다.

1단계 : 소규모용역비 지급신청서 제출(국회의원실 -> 국회사무처) : 연구용역보고서 등 증빙서류 첨부해서 신청서 제출
2단계 : 용역수탁자에게 입금(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 -> 용역수탁자)

이와 같은 흐름에서, 국회의원실이 국회사무처에 소규모용역비 지급신청서를 제출해서 용역수탁자에게 입금이 되도록 하는 것은, 실제로 연구용역이 수행

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피고발인들의 행태를 보면, 허위로 연구용역을 수행한 것처럼 꾸며서 용역수탁자에게 입금이 되도록 하거나(피고발인 이은재, 황주홍), 사실상 연구용역을 수행했다고 볼 수 없는데도(정체불명의 단체가 용역을 받았고 보고서 내용 전체가 표절·명의도용인 경우) 용역수탁자가 용역비를 받도록 서류를 낸 경우(백재현 의원), 허위서류를 꾸며서 소규모정책연구용역비를 타내거나 비공식보좌진의 배우자, 형을 용역수탁자로 꾸민 경우(강석진 의원)입니다.

이는 국회사무처 공무원을 기망하여 용역수탁자가 현금을 입금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국가를 상대로 한 사기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수사의뢰인 서청원 의원도 전혀 전문성이 없는 건설·토목회사 임·직원에게 북핵위기나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용역을 맡긴 경우로서, 사실상 연구용역이 수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혐의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 그러나 오늘 고발인들이 고발과 수사의뢰를 하는 건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회사무처는 지금도 국회의원들이 국민세금으로 발주한 연구용역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그 보고서들을 보면 수많은 엉터리보고서들이 발견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들을 정상적인 용역대금을 주고 발주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므로, 수많은 범죄행위들이 은폐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고발인들은 본 고발과 수사의뢰건만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발주한 지난 10년간의 소규모 정책연구용역 전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것을 요청합니다. 국민세금이 정당하게 사용하는지를 감시해야 할 국회에서 국민세금을 불법적으로 편취하는 행위가 이루어져 왔다면, 이는 검찰이 명운을 걸고 수사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형법상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최소한 2009년 이후에 이루어진 국회의원 정책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수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불과 1년치의 서류를 수사권도 없는 시민단체와 언론이 조사했어도 이렇게 여러 건의 비리가 발견됐다면, 지난 10년간 수많은 범죄들이 저질러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고발인들은 검찰이 지난 10년간의 국회의원 정책연구용역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할 책무가 있다고 판단하며, 전면수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 2. 피고발인별 범죄혐의

### 가. 이은재 의원

이은재 의원의 경우에는 보좌진의 지인에게 3건, 총 1,220만원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가 돈을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연구용역을 하지도 않으면서 연구용역비를 청구한 것은 국가를 상대로 사기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해당 연구용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용역수행자	소속, 직위(용역비지급신청서 기재)	용역제목	계약기간	계약금액
홍00	강사, 자유기고가	국가정보활동 관련 국내외 입법례 및 판례동향 검토	2016.9. - 11.	5,000,000원
홍00		1947년 이후 미국정보공동체 개혁에 관한 연구 번역	2017. 11.	5,000,000원
홍00		미국의 정보기관과 연방의회의 감시기능 강화 관련 번역	2017.11.	2,200,000원

또한 이은재 의원은 2016. 10에 ‘국가정보활동 관련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번역’이라는 정책 연구 용역(용역대가 4,257,290원)을 보좌관의 동생(박00)에게 맡기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고발사실에는 포함시키지 않지만 참고로 서술합니다.

#### 나. 백재현 의원

백재현 의원은 선거운동을 도와준 사람(고00)이 책임연구원으로 되어 있는 정채불명의 단체(한국경영기술포럼)에 2012-2017년에 8건, 합계 4,000만원의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 중 2건은 100% 표절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00이 지난 2012년 작성한 ‘학림지구 광역교통 효율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는 한국교통원이 광명시에 제출한 보고서를 표절한 것이고, 2014년 작성한 ‘구일역 광명측 출입구개선 타당성조사 연구’는 1년 전에 나온 광명시 보고서 그대로 베낀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실제로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수행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고00은 교통부터 재난, 여성, 청소년,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의 연구용역을 수행했는데, 전문성을 인정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백재현 의원은 국회사무처에 소규모정책연구용역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서 용역비가 지급되게 한 것입니다.

용역수행자	소속,직위	용역제목	계약기간	계약금액
고00	한국경영기술포럼 책임연구원	학림지구 광역교통 효율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2012.6.12 - 8.30.	5,000,000원
고00		광명평생학습도시의 비전 및 평생교육제도 개선방안 연구	2013.5.7. - 8.19.	5,000,000원
고00		위기의 청소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2014.12.12. - 2015.2.7.	5,000,000원
고00		위기의 여성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2014. 4.3. -	5,000,000원

		연구	2014. 6. 20.	
고00		구일역 광명층 출입구 개선을 위한 타당성조사연구	2014. 7. 12. - 9. 30.	5,000,000원
고00		재난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연구	2014. 5. 13. - 10. 2.	5,000,000원
고00		위기의 재난사고 대책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2016. 8. 9. - 10. 6.	5,000,000원
고00		학력인정시험의 제도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7. 8. 9. - 11. 3.	5,000,000원

또한 백재현 의원이 한국조세선진화포럼에 발주한 연구용역 또한 실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연구용역입니다. 이 단체가 지난 2013년 500만 원을 받고 작성한 ‘지방세제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는 한국지방세연구원 김 모 연구위원의 이름과 연구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뉴스타파) 취재결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이 단체와 공동 연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0년 10월 이 단체가 작성한 ‘2011 금융세제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 역시 표절이었습니다. 뉴스타파 취재결과 이 보고서는 지난 2010년 한국세무학회 등에서 주관한 ‘금융세제 개선방안’ 추계학술발표대회 자료였습니다. 기존에 열린 학술대회 자료를 표절해 연구비를 타낸 것입니다. 당시 학술대회 패널로 참여한 문00 한림대학교 교수는 언론(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세무학회 심포지엄 자료를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이다. 책임연구원 이 모 씨라는 사람이 제 자료를 이름만 바꾸고 사용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용역수행자	소속,직위	용역제목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00		2011 금융세제 개선방안 보고서	2010	5,000,000원
이00	한국조세선진화포럼 연구원	지방세제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2013	5,000,000원

이 단체가 2010년 작성한 ‘국제회계기준(K-IFRS)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

방안’이라는 보고서 역시 이미 학술지 등에 발표된 논문 등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보고서에 이름이 올라간 서울대학교 정00 교수는 이메일을 통해 “한국조세선진화포럼이라는 단체는 들어본 적 없는 단체다. 제 논문이 보고서에 통째로 실린 것이 황당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백재현 의원은 입법보조원에게 연구비를 지급한 뒤 돌려받은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백재현 의원은 지난 2017년 1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식조사 및 기능전환을 위한 방안’이라는 소규모 연구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언론(뉴스타파) 취재 결과 이 돈은 당시 대학생이던 백재현 의원실 입법보조원 채00씨에게 지급됐습니다. 백재현 의원실은 “연구 주제가 민감해 실제 연구자가 신원 노출을 원하지 않았다. 당시 입법보조원인 채 씨에게 돈을 지급했고, 채 씨가 그 돈을 연구자한테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채 씨는 실제 연구자의 이름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채 씨는 언론(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돈을 교수한테 준 게 아니라 보좌관한테 줬다”고 말했습니다.

#### 다. 황주홍 의원

황주홍의원(민주평화당)의 경우에도 언론(MBC) 취재결과 아래 표의 연구용역에 대해 연구용역비로 지급했던 돈 600만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용역수행자	소속,직위	용역제목	계약기간	계약금액
유00	한국TV홈쇼핑협회 과장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정책제언	2017. 10. 1. - 10. 31.	3,000,000원
유00		연안공영제 보고서	2017. 9. 1. - 10. 2.	3,000,000원

#### 라. 강석진 의원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은 2016년 한 아르바이트 대학생(김00)에게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위한 현안대책 제언'이라는 200만원짜리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러나 김00씨는 국회에 제출된 용역보고서를 직접 쓰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김00씨는 국회에서 열린 두 차례의 간담회에서 발제를 한 것으로 해서 50만원의 발제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발제비를 받은 사실도 없었습니다. 결국 250만원의 연구용역비와 발제비는 허위로 꾸민 서류에 의해 지급된 것입니다.

또한 강석진 의원은 2016년에 '보건복지부 현안에 대한 연구'라는 연구용역 2건을 30대 초반의 모 제약회사 주임(신00)에게 발주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연구용역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신씨의 배우자인 홍모씨가 강석진 의원실에서 무급으로 일하고 있었고, 허위로 서류를 꾸며 450만원의 연구용역비를 타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의료산업 발전'과 '국민 먹거리 안전'에 대한 2건의 연구 보고서는 해양생물 관련 연구개발업체의 연구원인 홍00씨가 쓴 것으로 돼있는데, 홍00씨는 위 홍모씨의 친형이었습니다. 이 용역들에 지급된 400만원도 정상적인 연구용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실제로 연구용역을 수행하지 않고 허위서류를 꾸며 돈을 받아낸 것은 사기혐의가 짙습니다. 만약 인건비 등으로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입법및 정책개발비의 목적과 달리 사용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실제 돈이 흘러간 곳에 대해서는 추가수사가 필요합니다.

### 3. 피 수사의뢰인 서청원의 사실관계

서청원 의원은 2017년 <북핵 위기를 반영한 대북 정책 개선 방안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용역을 수행한 장00씨는 모 토목 엔지니어링 업체의 상무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해당 연구에는 국회 정책개발비 5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서청원 의원은 보고서 원문도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청원 의원은 지난 2016년 9월에 진행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에 관한 연구용역을 모 토목회사 과장으로 재직중인 윤00씨(89년생)에게 맡겼습니다. 서청원 의원은 이 보고서 원문도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용역들은 도저히 전문성을 인정할 수 없는 용역수행자에게 용역을 맡긴 경우이며, 실제로 용역이 수행됐다고 믿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수사가 필요합니다.

#### 4. 결 론

이처럼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국가를 상대로 한 사기행위이며, 국회의원이 헌법 제46조 제1항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청렴의무를 망각하고 국민세금을 빼먹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최대한 신속하고 엄중하게 수사해서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아직까지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지난 10년간의 국회의원 정책연구용역에 대해 전면적인 수사를 해서 감춰져있는 범죄들을 적발하고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헌법이 규정한 ‘법앞의 평등’은 근본적으로 훼손될 것입니다. 검찰은 명운을 걸고 국회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행위들에 대해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2018. 10. 24.

고발인 1. 세금도둑잡아라 (인)

2. 함께하는 시민행동 ‘좋은예산센터’ (인)

3.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인)

#### 증거자료

1. 뉴스타파 기사
2. 소규모 정책연구용역 내역(2016년 6월 - 2017년 5월)
3. 소규모 정책연구용역비 지급신청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